

53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 01

## 들어가며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 신종감염병이 보고된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지 8개월가량이 지났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빠른 속도로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2020년 9월 6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2천7백만 명 이상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거의 90만 명에 육박했다. 이 질병을 종국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분배는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 결과 코로나19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중 순위권 내에 들 것이 확실하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는 항생제 등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등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앓아갔던 감염병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왔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두창(천연두)은 의무 백신 접종으로 사라졌고, 치명적이었던 여러 감염병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생활환경 및 영양의 개선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염병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경제발전으로 인간의 생활 행태가 변화하면서 만성병의 시대가 열렸고 감염병은 후진국의 질병, 그리고 만성병은 선진국의 질병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스(SARS), 돼지독감(swine flu), 메르스(MERS) 등의 신종감염병이 다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두됐지만 이러한 감염병 역시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러한 낙관론이 무색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우리는 그동안 현대의학의 힘만으로는 신종감염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인구 이동을 막기 위하여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봉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다시 등장했고 우리는 이제 이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봉쇄는 민주주의 발전으로 보호받던 개인의 이동권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익숙했던 규범과 질서, 즉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권위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지난 8개월간 코로나 19 경험을 돌아보고 이것이 정치 및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근거해 최근 지배적 담론이 되고 있는 '언택트'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겠다.

## 02

국제사회의 약화와  
민족주의의 대두

WHO는 2000년대 초반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가져올 위험 중 하나가 신종감염병의 출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WHO 2003).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감염병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2015년 WHO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생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청사진 고문단(R&D Blueprint Advisory Group)’을 조직했다. 또한 2018년에는 새로운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을 대비하기로 하고 이 새로운 감염병을 ‘질병 X(disease X)’라 칭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첫 번째 질병 X가 되었다. 즉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이전부터 예측되었던 질환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질병 X’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대응 역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그 심각성에 비추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확산되었다. 심지어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머뭇거린 것은 WHO의 친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Pérez-Peña & McNeil 2020). 범유행병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개발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WHO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자 방역을 위한 국제협력은 약화되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패권 전쟁은 범유행병과 관련한 이슈로 옮겨가 국제협력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자국 내 확산과 방역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WHO 역시 친중국 성향이라고 비판했으며 지원금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사태 초기 질병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백신과 치료제의 부재로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던 시기 미중 갈등, WHO의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다시 코로나19 범유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각국 정부는 독립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Amat et al. 2020). 대다수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거나 부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국가간 인구 이동이 급감했다. 세계화로 어느 때보다 지구적 네트워크가 강화된 시대에 국경 폐쇄로 인한 인구 이동의 제한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고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들은 갑자기 바이러스의 매개체 취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

정치적 목소리가 약하거나 부재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점차 심해졌다. 세계적으로 외국인 혐오 또는 인종주의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우한폐렴’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 미국 정부의 인종주의는 방역의 실패로 이어졌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고 유럽의 입국은 통제하지 않았다가 이탈리아 등지로부터 건너오는 코로나19를 막는데 실패했다(Gonzalez-Reiche et al. 2020). 더군다나 뉴욕 등 대도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저소득계층과 유색인종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민 의료보험의 부재 및 의료체계의 부실 때문에 검사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불평등 및 의료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대신 인종주의와 백인우월주의의 동원으로 이 문제를 피해 가려 하고 있다(Mystal 2020).

유럽 역시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공공의료와 사회복지가 약화되면서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다. 범유럽병에 맞서야 하는 국제기구와 국제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별 국가는 독립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인종주의적 혐오가 점차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 코로나19로 소위 선진국의 위상이 심하게 흔들리자 초기 대처를 잘한 국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 몽고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방역의 성공을 자신의 체제 또는 민족 우월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대학의 클로에(Kloet et al. 2020)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생명정치 민족주의(biopolitical nationalism)’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필자는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global bio-hegemony contest)’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했다(김재형 2020). 코로나19 또는 방역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회 경제 문제를 민족주의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모두에서 보이는 듯하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내부 혼란을 시민의 정보 통제와 정부 비판을 억누르는 방식과 더불어 중국 체제의 우월성 및 민족주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던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2019년 홍콩시위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중국 공산당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식 방역 모델을 주변국에 전파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 지원을 통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 사회에서 흔들리는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식 민족주의의 대두는 중국 내 소수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와 차별로 이어졌는데, 예를 들어 광둥성의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을 집에 가두고 모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 03

##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민주주의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2020년 2월 19일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역당국은 이른바 3T(Test-Trace-Treat)라고 하는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정책을 중심으로 이를 잘 막아냈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재난문자 등도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선진국이라고 간주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과 대비되면서 한국의 대처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BBC는 3월 12일자 뉴스에서 한국의 방역 방식이 다른 국가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외신의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한국 방역 당국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국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정보를 통제하고 숨김으로써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이 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게다가 중국 우한(武漢) 지역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 및 이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중국 내 코로나19는 제어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서유럽 또는 북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것과 대비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가 범유행병의 확산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쇄(lockdown)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적절히 통제할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무능하지 않다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은 것이다.

물론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3월 20일경부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술관료(technocrat)가 더 강한 지도력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어해줄 것을 요구했다(Amat et al. 2020). 이러한 상황은 서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했는데,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봉쇄 결정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Bol et al. 2020). 즉 유럽 각국의 시민들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발생했던 3월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했고, 시민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바이러스

---

예방과 맞바꾸는 것을 합리적이고 심지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기술관료에 의한 권위주의적 체제로의 변환은 단기간에는 무해하고 효과적으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 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같은 봉쇄 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의 정보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이동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Frey et al. 2020). 오히려 같은 수준의 봉쇄 정책을 취할 때 민주주의 정부가 독재 정부보다 인구 이동을 20% 정도 더 감소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정부일수록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더 큰 신뢰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는 비상사태에서 개인들이 각자도생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연대하도록 만드는 커다란 사회적 자본이 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초기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방역당국의 정책에 대하여 매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에 근거하여 합심하여 코로나19 초기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타격을 최대한 줄였다.

## 04

K-방역 민족주의에 가려진  
한국사회의 문제

이처럼 권위주의에 비해 민주주의 체제가 코로나19에 더 잘 대응하고 있고 한국사회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시대 한국 사회 역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대 보건대의 유명순 교수의 <국민 위험인식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달 동안 한국 사회는 깊은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많은 시민이 정체불명의 질병의 위협과 이로 인한 사회의 붕괴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꼈고,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하여 분노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의 일부는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중국인 혐오와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들이 한국에 몰려와 무료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됐다. 가짜뉴스는 불안과 결합하여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로 발전하였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2월 중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마스크 구입이 힘들어졌는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담론이 다시 강해졌고, 이를 막지 않는 한국 정부를 '친중국'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조선족과 외국에서 귀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그 결과 국내 건설업과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많은 중국인과 조선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정체불명인 질병의 등장으로 발생한 공포와 분노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충분한 비판과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3월 이후 한국의 방역에 대한 외신의 찬사가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가 비가시화된 자리를 K-방역의 민족주의가 대체했다.

실제로 K-방역은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루 900명이 넘었던 확진자 수는 정부와 사회의 자원을 집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점차 줄어들었고 코로나19는 통제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취약성은 곧 비가시화되었다. 대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 과정 중에 신천지라는 종교에 빠진 청년들, 대남병원 등의 시설에 장기 수용되었던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던 콜센터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하지만 K-방역에 대한 열광과 찬사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인종주의적 혐오가 비가시화된 것과 같이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

코로나19가 잠시 드러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K-방역이라는 천으로 가려진 것이다.

대신 K-방역의 성과 위에 많은 이들이 언택트(untact, 비대면)라고 하는 뉴노멀(new normal)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 목표로 선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언택트 산업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종류의 뉴딜 계획을 제시했는데 모두 산업 육성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은 인공지능(AI) 산업, 원격 의료 및 돌봄 산업, 교통과 건설 등의 분야의 디지털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 뉴딜 역시 코로나19의 등장이 무분별한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에 있다는 근본적인 반성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산업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필자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 8개월 간 한국사회가 언택트를 겪으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K-방역으로부터 나온 장밋빛 미래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이미 8개월에 걸쳐 언택트를 체험했다. 우리가 경험한 언택트로부터 어떠한 장밋빛 미래도 상상할 수 없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었던 반면, 더 많은 이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면대면 노동에 종사해야만 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 감염의 희생자가 되었고, 물류 창고 노동자들도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집단으로 감염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었고, 사용자에게 정당한 항의도 할 수 없었다. 한편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늘어나는 배달량을 무리하게 소화해야만 했고, 그 결과 과로사로 택배기사들이 줄지어 사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언택트가 사회의 일정 집단에게는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지만, 또 다른 집단에게는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언택트로 인한 위험은 주로 노동지위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대별로는 20대와 50대가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막고 있다. 언택트로 인하여 20대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50대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다.

돌봄 노동은 어떠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돌봄 노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육아시설 및 학교가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양이 증가하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돌봄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평가절하되고 있다(추지현 2020).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과 소득분위 하위계층인 경제 취약층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국민일보 2020.9.9.). 기존의 사회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고립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개월간 우리가 경험한 언택트는 유쾌하지 못한 것이었고,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한편 언택트는 기존의 계층간 교육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중이다. 원격수업으로 가정의 역할이

---

극대화되면서 집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는 가정,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정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성적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언택트로 인한 불평등의 강화와 시민의 고통에 대한 논의와 성찰 없이 산업 발전에 집중하는 정부의 모습은 매우 아쉽다. 언택트로 인한 고통과 이익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크나큰 위기라 할 수 있다.

## 05

## 맺음말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기존의 정치 체제 및 사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인종주의적 혐오 또는 민족주의, 권위주의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및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의 망령인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대고 있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잘 막음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Rogin 2020).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성공의 경험을 근거로 K-방역과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핵심은 언택트라고 하는 뉴노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의 언택트의 경험은 기존의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충분히 성찰하고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 없는 포스트코로나시대는 기존의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언택트로 인한 빈곤,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보편적 지급이나 선별적 지급이나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언택트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2월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환자 수용에 큰 애를 먹었다. 이때 경상남도의 경우 적자를 이유로 폐쇄된 진주의료원의 존재가 크게 아쉬웠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방법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했고, 최근 의료계의 파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사회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언택트 시대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언택트 시대를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다가올 언택트 시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다. 민주주의를

---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시도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술과 산업 중심의 언택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일보(2020.9.9.), “심상찮은 코로나 블루, 수도권 2030 여성 극단 선택 급증”.
- 권순정(2020),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과제: 재조명되는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학교의 역할”,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여름호(239호).
- 김재형(2020),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과 대한민국: K-방역 모델이 놓친 문제들”, SNUAC 다양성+아시아, <http://diverseasia.snu.ac.kr/?p=4245>
- 추지현(2020), 「코로나19와 ‘우리’의 일상」,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돌베개.
- Amat, Francesc, Albert Falcó-Gimeno, Andreu Arenas, JorMuñoz(2020), “Pandemics meet democracy: Experimental evidence from the COVID-19 crisis in Spain”, SocArXiv. April 6. doi:10.31235/osf.io/dkusw.
- Bol, Damien, Marco Giani, André Blais, Peter John Loewen(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doi: 10.1111/1475-6765.12401
- Frey, Carl Benedikt, Chinchih Chen, Giorgio Presidente(2020), “Democracy, Culture, and Contagion: Political Regimes and Countries Responsiveness to Covid-19”, working paper, Oxford Martin School, Oxford University, <https://www.oxfordmartin.ox.ac.uk/news/democracies-more-effective-on-covid-19/>
- Gonzalez-Reiche, Ana S., et al.(2020), “Introductions and early spread of SARS-CoV-2 in the New York City area”, *Science* 369, pp.297-301.
- Kloet, Jeroen de., Jian Lin, Yiu Fai Chow(2020), “‘We are doing better’: Biopolitical nationalism and the COVID-19 virus in 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 Mystal, Elie(March 20, 2020), “The Media Is Helping Spread Trump’s Coronavirus Racism”, *The Nation*.
- Pérez-Peña, Richard, Donald G. McNeil Jr.(May 7, 2020), “W.H.O., Now

- 
- Trump's Scapegoat, Warned About Coronavirus Early and Often",  
The New York Times.
- Rogin, Josh(March 11, 2020), "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 The Washington Post.
- WHO(2003), "Climat Change and Human Helath-Risks and Responses  
Summary", [https://www.who.int/globalchange/environment/en/  
ccSCREEN.pdf?ua=1](https://www.who.int/globalchange/environment/en/ccSCREEN.pdf?ua=1)
- WHO(2018), "Prioritizing diseas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mergency  
contexts",[https://www.who.int/activities/prioritizing-diseases-  
for-research-and-development-in-emergency-contexts](https://www.who.int/activities/prioritizing-diseases-for-research-and-development-in-emergency-contexts).
- Zimmer, Carl(April 8, 2020), "Most New York Coronavirus Cases Came From  
Europe, Genomes Show", The New York Times.

#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9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